

대전광역시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동자치지원관, 간사,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사무공간 조성비, 자체 사업비 등 재정 지원
- 내·외부 자원과의 연계 노력으로 사업초기 현장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민관협력(워킹그룹, 실무협의회) 대응으로 조기 안정화(새로운 대전위원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적자본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 광역 단위, 구 단위 중간지원조직(마을공동체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주민자치회 역량 강화 네트워크 구축 계획

I.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

1. 주민자치사업 관련 지원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특이사항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 기간 : '18. 8. ~ '20. 12 • 대상 : 8개동 • 사업비 : 2,096백만원 • 내용 : 시범조례 제·개정, 동장 직위공모, 주민자치회 구성, 자치계획수립,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행	주민자치회 안착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운영
주민자치회장(위원장) 역량강화 워크숍	• 일시 : '19. 5. 30. • 대상 : 79개동 주민자치회장(위원장) • 내용 : 주민자치의 이해, 소양교육 등	

II. 대표사례

1. 사례명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2. 추진기간 : 2018. 8. ~ 2020. 12.

3. 추진주체 : 대전광역시

4. 추진배경 및 목적

- 시민주권도시 구현을 위한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적 기반으로 시범동간의 편차없는 주민자

치회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한 제도 설계(시-자치구-동 협업체계) 및 실험 주도

- 주민자치회 구성·운영 및 동 단위 마을계획 수립과 마을총회 개최 등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선례를 만들어 나가는 테스트베드로서 8개동에 대한 시범사업 추진

5. 추진과정 및 내용

① 민선7기 출범당시 여건 및 문제적 상황

- 중앙정부 국정과제 및 민선7기 공약에 따라 시범사업계획을 마련(2018년) 하고, 2019년 4개 자치구 8개 시범 동을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함
- 시범사업 초기,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동자치지원관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등 일선 현장의 혼란 및 불만이 해당 동과 자치구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됨
-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 사업단의 자문을 받아 서울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전형 시범사업을 설계했으나 준비기간 부족 등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범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지 못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함
-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자생단체 또는 주민자치회와 같이 행정 친화적이거나 단순 자원봉사의 성격을 뛰어넘어 주민친화적인 대표 주민조직으로 거듭나야 하는 규범적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이미 동에 깊게 뿌리내린 관행의 '경로의존성'에 따라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및 불만이 사업과정에서 일부 드러나면서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방해함

② 사업목표

가. 단기 세부이행목표

- 민관협력 체계를 통해 초기 시범사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19~'20)
 -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제도 : 주민자치회 구성, 동자치지원관 제도 도입,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정, 분과위 운영, 자치계획 수립, 주민총회, 자치계획 실행 등
 - 자치구와 협업으로 현장 애로사항의 상시적 의견수렴과 신속한 대응책 마련
 - 1단계 시범사업의 성과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2단계 사업 제도개선안 마련
- 1차 년도 제도개선 방안을 반영한 2단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나. 중장기 사업목표

- 자치구별 자율전환을 통한 주민자치회 제도화 확대 추진('20~)
-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계획 사업을 포함한 각 시책들과 연계하여 풀뿌리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인 생태계 조성 도모
- 지방정부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서 주민조직과 행정조직의 공동생산(co-production)의 아이디어 접목을 통한 선진적 동단위 행정서비스전달체계 구축

③ 추진내용

가. 사업추진 과정 개요

-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8. 8
- 주민자치 토론회(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등 대상) / '18. 9
- 참여동 모집 및 확정(8개동) / '18. 10
- 찾아가는 주민설명회(8개동) / '18. 12
- 시범사업 사업비 교부 / '19. 2
- 시범사업 관계자 워크숍 / '19. 3

나. 사업추진 세부내용

< 재정지원 >

- 1개동 기준 2년간 262백만원(특교금)
 - '19년 156백만원, '20년 106백만원
 - 자치지원관·간사 인건비, 주민자치학교 운영비, 사무공간 조성비, 자체 사업비 등

< 사업 공감대 형성 및 지원 >

- 주민자치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자치 토론회 / '18. 9
 - 79개동 마을활동가, 주민자치위원 등 300여명
- 시민홍보 및 참여촉진을 위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8개동) / '18. 12
 - 현장 전문가(금천구 주민자치사업단장) 초청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계자 네트워킹을 위한 워크숍 / '19. 3
 - 시구동 담당자, 자치지원관, 시민단체 등 45명

④ 문제해결 노력

가. 내부 역량·자원(예산, 인력, 권한 등) 활용 내역

< 자치구 및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단순 서비스전달 사업이 아닌 주민의 조직화를 통한 역량 강화와 자치구 행정과정의 참여를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영역임
- 주민의 조직화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자치구의 공감대 형성 및 협력 없이는 대전시가 지원하는 사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자체 분석이 이루어짐
- 시본청 1명의 담당자만으로는 새로운 제도 실험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판단아래 자치구, 민간부문 전문가, 시민단체 및 중간지원조직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함
 - 효과적인 의견수렴과 대안제시를 위해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위한 대전시와 자치구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동자치지원관, 동담당공무원, 자치구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소통채널을 구축함
 -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의제 중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고려할 부분의 효과적인 논의와 해결을 위해 민간전문가와 자치구 담당 팀장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을 별도로 운영함

- 문제해결의 신속하고 유연한 접근을 위해 제도적 대안으로서 자문위원회 대신 소규모 워킹그룹 방식을 선택함

< 대전시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선 협력 >

- 동 행정조직과 주민자치회의 연결고리이자 주민역량강화 지원의 역할을 맡게 된 자치지원관의 학습 및 네트워크화를 통한 역량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 동자치지원관 지원 예산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시범사업 예산에는 미포함
 - ⇒ (단기적 해결) 공동체정책과와 협의 → 공동체지원국 산하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를 통한 역량강화 지원방안 마련
 - ⇒ (장기적 해결) 자치구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설립되는 경우 동자치지원관을 중간지원센터 소속으로 배정하고 주민자치회 지원역할 수행

나. 외부 자원과의 연계 노력

< 새로운대전위원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체정책과(사회적자본지원센터), 민간전문가 등과 민관협력체계 구축 >

- 워킹그룹 구성·운영(4회) / '19. 3
 - (구성) 새대위 2, 참여자치시민연대 1, 사자센터 1, 민간전문가 2, 시·구공무원 7
 - (기능) 실무협의회의 현장 문제점 해결방안 제시, 제도개선 사항, 정책방향 등 논의
- 실무협의회 구성·운영(6회) / '19. 3
 - (구성) 참여자치시민연대 1, 사자센터 1, 자치지원관 8, 시·동공무원 10
 - (기능) 현장 문제점, 제도개선 사항 등 논의
- 주민자치역량 강화 주민자치포럼
 - '19. 2 / 마을활동가, 주민, 전문가 등 대상
 - 사자센터·참여자치시민연대 주관
- 주민자치회 운영 전문가 양성교육(3회)
 - '19. 2~3 / 동 담당자, 자치지원관 등 대상
 - 사자센터 주관
- 자치지원관 주민자치학교 사업
 - '19. 5 ~ 12 / 사자센터 주관
 - 실무워크숍(5월), 풀뿌리 마을지기 학교, 주민자치회 기록사업(~12월)

⑤ 장애요인 및 극복전략

- 대전시와 자치구, 대전시와 외부 전문가 사이의 신뢰 구축의 문제
 - ⇒ 과거 대전시에서 자치구로의 수직적인 지시 형태의 관행을 극복하고 자치구로부터의 적극적 의견수렴과 협력을 이끌어내는 라운드테이블 방식의 수평적 소통을 시도하는 등 의식적으로 소통 노력을 기울임
 - ⇒ 전문가의 일방적 의견제시와 담당공무원의 소극적 대응의 행정문화를 넘어서서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의 책임감과 파트너십 형성을 위해 워킹그룹 운영의 몇 가지

원칙을 정하고 추진함(모든 참여자의 기탄없는 의견교환과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된 결론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추진하기로 함)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현장에서 초기 다양한 문제점 발생
 - ⇒ 현장의 요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기되었으나 단기적 해결의제와 장기적 해결의제로 구분하고 단기적 의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고 신속히 응답하는 접근을 취함
 - ⇒ 장기적 의제에 대해서는 2~3차례의 이해당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 형태의 의견수렴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차기 제도설계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접근 함
 - ⇒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소통의 채널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고 자치구 또는 현장과의 협력적 해결의 의지가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함으로써 동반자로서이 시에 대한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함
 - ⇒ 과거처럼 프로젝트 방식이 아니라 일단 재미가 있어야 하고 더디게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한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전달하면서 현장의 조급함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함
 - ⇒ 초기단계에서 작은 성과라도 소중히 생각하고, 서투르더라도 주민자치회 활동을 적극 격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대전시의 정책방향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함

6. 성과 및 지역사회 기여

- 가. 민관협력체계 구축(워킹그룹, 실무협의회) 운영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 대응 및 개선
 - ⇒ 가급적 수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정책결정
- 사업추진시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8개동 공유)
 - 시범사업 추진일정 탄력 조정 : 마을계획 마련 등 동별 특성에 맞게 자율 적용(사업 예산 이월 등)
 - 주민자치회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지원·집행방법 등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시 및 자치구 협의 검토)
- 시범사업 촉진을 위한 동기부여
 - 자치지원관 업무기준 명확화 : 촉진자(전문가)로서 역할 등
 - 자치지원관 처우 개선 : 초과근무시 대체휴무 실시 등
 - 시범동간 경쟁 지양, 동별 자원(인적·물적)에 맞게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회 구성·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 관계기관과 협업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공동체정책과(사자센터)의 자치지원관 지원체계 구축
 - 자치지원관(8개동)간 협력 네트워킹 공간 지원(매월 2회)
 - 핵심인력(자치지원관, 간사, 실무자 등) 대상으로 사업 추진방향 등 인식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 시범사업 방향 설정 및 추진 매뉴얼 마련 등
 - 추진과정의 노하우 등 실질적 매뉴얼 마련(자치지원관 협의)

- 시범사업 확대 등 향후 로드맵은 워킹그룹에서 방향 정립

나. 시범동(8개동) 주민자치회 구성 완료

○ 사업초기 현장에서 발생된 다양한 문제점을 민관협력(워킹그룹, 실무협의회) 대응으로 조기 안정화

- 시범조례 제·개정, 자치지원관 선발, 주민자치회 발대식, 자치규약 제정, 분과위원회 구성

<사업 사진>



주민자치회 전문가 양성교육('19.02.27)



실무협의회 회의('19.03.19)



워킹그룹 회의('19.04.24)



원신흥동 주민총회('19.07.25)